광주·전남 지자체 의정비 인상 분석 해보니…

최고 79%…주민 반발 확산

전남 평균 35.2% …시민단체 등 재심의·심의 내용 공개 요구

12일 신안군과 화순군을 끝으로 논란을 거듭해온 광주·전남지역 29개 자치단체의 지방의원 의정비 결정이 마무리된 가운데 전남지역 22개 시·군의 평균 인상률이 35.2%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에 대해 주민들과 시민단체들은 재심의와 심의 내용 공개를 요구하고 있어 내년 예산 심의와 관련 조례 개정 과정에서 또 한 차례 논란이 예상된다.

신안군은 이날 의정비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도 군의원 의정비를 올해 2천536만원에서 41.9% 오른 3천600만원으로 책정했다. 심의위는 13개 면이 섬으로 구성된 지역특수성을 감안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수차례 회의를 연기해온 화순군 의정비 심의위원회도 이날 올해 2천520만원 보다 38.4% 오른 3천487만6천원으로 결정했다.

이로써 지난달부터 시작된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 5개 자치구, 전남 22개 시·군의 내년도 의정비가 모두 결정됐다.

광주시는 올해 4천231만원에서 1.44% 오른 4천291만원, 전남도는 3천960만원에서 19.9% 인상한 4천748만원으로 결정했다. 광주 동구는 광주·전남 자치단체 중 유일하게 동결했다.

광주 5개 자치구의 평균 인상률은 3.3%, 전남 22개 시·군은 35.2%로 파악됐다.

광주·전남 의정비 결정 현황
(11월 12일 현재, 단위:만원)

시·군·구	2008년 의정비	인상률
광주시	**4,291**	**1.4%**
광주 동구	2,778	동결
광주 서구	2,870	2.8%
광주 남구	2,910	5.2%
광주 북구	2,926	3.7%
광주 광산구	2,940	5.0%
전남도	**4,748**	**19.9%**
목포시	4,100	58.9%
여수시	4,100	49.6%
순천시	3,984	78.9%
나주시	4,500	75.2%
광양시	4,234	46.8%
담양군	3,225	34.4%
곡성군	3,506	44.7%
구례군	3,457	49.2%
고흥군	2,948	24.3%
보성군	2,800	13.8%
화순군	3,487	38.4%
장흥군	2,520	5.0%
강진군	2,775	25.0%
해남군	3,240	28.5%
영암군	2,707	8.9%
무안군	3,228	26.5%
함평군	2,520	9.0%
영광군	3,504	39.0%
장성군	3,576	49.0%
완도군	2,724	9.8%
진도군	2,747	17.6%
신안군	3,600	41.9%

전남지역 의정비 결정 현황을 보면 인상률이 가장 높은 시·군은 순천시로 무려 78.9%에 달했다. 이어 나주시 75.2%, 목포시 58.9%, 여수시 49.6%, 장성군 49.0%, 광양시 46.8% 등의 순이었다. 전남 5개 시의 평균 인상율은 61.9%였다.

의정비 액수로는 나주시가 4천5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광양시 4천234만원, 목포·여수시 4천100만원, 순천시 3천984만원 등이었다.

군지역에선 신안군이 3천600만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장성군 3천576만원, 곡성군 3천506만원, 영광군 3천504만원, 구례군 3천457만원 등의 순이었다.

반면 함평군·장흥군은 2천520만원으로 가장 적어 최고인 나주시와 비교하면 2천만원 가까이 차이가 나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3천만원 미만인 시·군·구는 광주 5개 구를 비롯 전남 8개 군 등 13개였다.

이와 관련 행정자치부는 전남도와 나주시, 목포시 등 전남지역 3곳을 비롯 전국 30여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주민소득 수준을 무시한 과다인상 ▲여론수렴 미준수 등 절차상 하자가 있었는지에 대해 현지 실태 조사를 벌였으며, 오는 19일부터 23일까지 2차 현지 실태조사를 추가로 벌일 방침이다.

한편 광주시의회 의원들은 13일 개회하는 제164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의정비 자진 동결 결의안'을 처리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끌고 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비수도권, 균형발전위해 대선 공동대응을"

광주·전남발전 방안 토론회

지방분권운동 광주전남본부 등 균형발전 관련 지역 단체들이 공동주최한 '2단계 균형발전 정책과 광주·전남의 발전방안' 토론회가 12일 오후 광주 무등산관광호텔에서 열렸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수도권 규제완화를 저지하고 균형발전을 이루기 위해서는 비수도권이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이해관계를 떠나 공동으로 대응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서정훈 광주전남분권운동본부 집행위원장은 12일 광주 무등산관광호텔에서 열린 '2단계 균형발전정책과 광주·전남의 발전방안'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서 "비수도권의 지방자치단체장과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 정치권, 지방대학, 지역 언론, 시민사회 등 지방의 각 주체들이 일치단결해 국회와 정치권을 대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 집행위원장은 또 현재 전국의 시민사회단체 대부분이 참여하고 있는 수도권과밀반대전국연대가 수도권 과밀해소 및 지역상생을 위한 대선 의제를 선정해 대선후보와 협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만큼 광주·전남을 비롯한 비수도권도 공조체제에 가세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와 함께 형광석 목포과학대 교수는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등 국가 지도자들을 임기 후 출신 지역에 거주하게 해야 한다는 이색적인 주장을 내놓았다.

형 교수는 "국가 지도자들이 임기를 마치면 출신 지역과 해당 선거구에 거주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면서 "지역 인재들이 대학과 취업 등의 문제로 지속적으로 지역을 떠나고 있는 만큼 지역 인재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지도자들이 모범을 보이는 모습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를 위해 시민단체 등이 나서 이번 대선 후보들이 법 개정을 약속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채희종기자 chae@kwangju.co.kr

남북 2차 국방장관회담 27~29일 평양서 개최

남북이 제2차 국방장관회담을 오는 27~29일 평양에서 개최하기로 합의했다.

국방부는 12일 판문점 북측지역인 통일각에서 북측과 국방장관 회담을 위한 군사실무회담을 갖고 이같이 합의했다고 밝히고 "제2차 남북 국방장관회담에서 남북 정상회담 합의문인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 번영을 위한 선언'의 이행을 위한 군사적 대책을 의제로 협의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지난 달 4일 서해 우발적 충돌 방지를 위해 공동어로수역을 설정하고 이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만들기 위한 방안, 각종 남북 협력사업에 대한 군사적 보장 조치 등을 협의키 위해 국방장관회담을 열기로 합의한 바 있다.

따라서 이번 국방장관 회담에서는 공동어로 수역설정과 연계된 서해북방한계선(NLL) 문제가 최대 난제가 될 전망이다.

국방부는 "그 밖에 제기될 수 있는 실무적 문제들은 추후 협의를 통해 해결해 나가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와 관련, "남측 대표단의 인원과 이동로, 이동수단 등에 대한 실무적 문제들은 군사실무회담이나 전화통지문 교환 등의 방법으로 계속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남북은 2000년 9월 제주도에서 제1차 국방장관회담을 개최하고 그 해 11월 중순 북측지역에서 2차 회담을 열기로 했으나 북측이 '행정적인 이유'를 내세워 무산된 바 있다.

/연합뉴스

국방부 과거사 진상규명위원회(위원장 이해동) 이기욱(가운데) 부위원장이 12일 국방부에서 1970~1980년대 재일교포와 관련한 간첩사건 4건 중 3건이 강압적인 수사로 조작됐거나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재일교포 '간첩사건' 일부 조작"

軍 과거사위

그동안 지속적으로 제기돼왔던 1970~1980년대 재일교포와 관련한 간첩사건 4건 중 3건이 강압적인 수사로 조작됐거나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다는 조사결과가 나왔다.

국방부 과거사진상규명위원회(과거사위·위원장 이해동)는 12일 '재일동포 및 일본 관련 간첩조작 의혹사건'에 대한 조사결과 발표를 통해 "1977년 재일동포 유학생 '김정사 간첩사건'은 일부 북한에 대한 고무·찬양은 있었지만 간첩행위는 없었다"면서 "1981년과 1986년에 각각 발표된 이헌치, 김양기 간첩사건 역시 불법 구금상태에서 이뤄진 고문 등으로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밝혔다.

재일교포 출신으로 서울에서 유학생활을 하던 김정사는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한민통) 간부 겸 대남공작지도원인 임계성으로부터 지령을 받고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했다는 혐의로 1977년 4월21일 서울 관악구 신림동 하숙집에서 보안사 수사관들에 의해 체포됐다 6월 기소돼 1심에서 무기징역을, 2심에서 징역 10년을, 대법원에서 상고기각돼 원심확정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는 이헌치, 김양기 사건에 대해서는 고문 등에 의해 조작됐을 개연성이 높다고 평가했을 뿐 간첩조작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결론을 유보했다.

/연합뉴스

지자체 예산낭비·모럴해저드 잡는다

정부, 예산 삭감·명단 공개 검토…의정비 과다 인상 불이익

지방자치단체들의 예산낭비와 모럴해저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에 대해서는 예산삭감, 명단공개 등의 조치를 취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의원들의 의정비를 지나치게 올리는 지자체에 대해서도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12일 기획예산처에 따르면 정부는 지자체의 예산낭비 사례가 적발될 경우에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예산 편성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기획처 관계자는 "현재 지자체들의 각종 예산낭비 사례가 중앙정부에 접수되고 있으나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상황"이라고 밝히고 "따라서 예산상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연말까지 마련해 내년부터 실시하는 것을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정부의 이런 조치는 지자체의 자율성을 해칠 수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기획처는 아울러 예산을 낭비한 지자체의 이름과 구체적인 사례내용을 공개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현재 기획처는 예산낭비 사례를 공개하고 있으나 해당 지자체의 이름은 밝히지 않고 있다. 기획처는 이를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도 생각하고 있다.

행자부는 의정비를 지나치게 많이 올리는 지자체에 대해 교부세 배정시 불이익을 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행자부 관계자는 "지자체들이 의정비를 너무 많이 인상하는 것을 막기 위한 다양한 방안에 대해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고 "교부세 배정시 불이익을 주거나 의정비 인상 한도를 설정하는 등의 여러가지 방안에 대해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